

2016. 2. 24. [수] 오전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기초경제2팀 김구년 팀장(02-731-2420),
이원복 연구원(2421), 이나영 사무관(2423)

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강화 !

[추진전략] 거시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성장률에서 고용률로

- ① 고용률 70% 추진체계 강화 및 고용영향평가 의무화
- ② 노동개혁,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와 잠재성장률 제고
⇒ 1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, 잠재성장률 1.25%p 제고 가능

[노동개혁] 37만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대 추진전략 제시

- ① 노동개혁 입법 원수 + 2대 지침 현장착근 등 정부지원 추진가능 개혁 추진
- ② 노사정위 대표성 강화, 전문가중심 공익안 마련 등 개혁추진방식 전환
- ③ 고용보호법제 개선 등 추가적인 개혁아젠다 발굴 추진
- ④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동시 추진 필요

[청년여성] 혁신센터 고용Zone, 청년희망재단 협업으로 10만명 이상 취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

- 2.24일(수)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(의장) 주재로,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,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」를 개최하였음
 - 민간 자문위원(22명), 총리, 경제부총리, 고용부·여성부·미래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청년위원장, 교육부 차관 등과
 - KDI원장, 노동연구원장, 여성정책연구원장, 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
- 이번 회의에서는 「일자리 중심 국정운영」 방안을 제시하고, 「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」, 「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」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먼저 이영선 부의장은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'일자리'임을 강조하며, 국민들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
 - 네덜란드, 독일 등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고용률 70% 조기 달성 및 유지
 -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(청년·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+유연성 제고)과 서비스산업 등 규제개혁이 병행될 경우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 1.25%p 제고(IMF WP, 2014) 가능
 - 일자리 증가 → 잠재성장률 상승 → 일자리 증대의 선순환 창출 예상
 - 고용률 70%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'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'로 설정하고,
 -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,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와 교육개혁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
 - 아울러, 거시 경제를 성장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,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과 청년·여성·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건의
 - * (청년) 고용디딤돌, 사회맞춤형 학과 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
 - * (여성) 시간선택제 확산, 보육지원 확충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
 - * (중장년) 중장년일자리법(파견법),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
 -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범부처 추진 체계를 강화*하여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제안
 - * 월 1회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,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, 청년·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
- 다음으로 「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」에서는
 - 이번 노동개혁으로 최대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, 고용·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 및 사회안전망 제고 효과를 기대

○ 이와 함께 향후 노동개혁의 네 가지 추진전략 제안

① 빠른 시일내 노동개혁 5법 입법을 완료하고 2대 지침의 기업현장 착근 등 정부차원 추진 가능한 분야의 노동개혁 진행

② 노동개혁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

- 청년·비정규직 등 과소대표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**노사정 위원회 대표성을 강화**
-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·공론화 협의 강화 등 현행 **합의 중심의 노사정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**할 것 등을 제안

③ **추가 개혁 추진**: 고용보호법제 개선 검토,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,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**추가적인 개혁 아젠다를 발굴·추진**

④ **교육개혁과 동시 추진**: 자녀교육부담 완화 및 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출 등을 위해 공교육 강화 등 **교육개혁**을 적극적으로 추진

□ 「**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**」에서는, 고용률 로드맵 70% 달성의 핵심은 **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**에 있음을 지적하고,

○ **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부진한 주요 원인** 중 하나로 복잡한 일자리 전달체계와 저조한 정책 효과성 및 사업인지도 등 **일자리 지원정책의 비효율성**을 강조

○ **일자리 지원정책 5대 실효성 제고 원칙**을 제시

① **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을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**

-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도록 **고용영향평가 의무화**
- 고용률 70% 추진체계를 통해 **범부처적 정책 평가 및 조정**

② **고용Zone·청년희망재단 중심 민관협업추진**

-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Zone과 청년희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10만명 이상의 취창업 지원(고용디딤돌, 사회맞춤형학과, 일학습 병행제 등)

③ 기업에서 개인으로 **고용보조금 지원방식 개선**

- 재정투입 대비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보조금 사업 평가를 거쳐 **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**

④ **저소득층 근로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**

- 저소득층 근로청년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실업난이 지속
- **시혜성이 아닌 일자리매칭, 일자리 능력제고** 방향으로 지원
- **중소기업 취업연계 학자금 상환** 지원과 **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지원확대**를 제안

⑤ 수요자 맞춤형으로 **일자리지원정책 홍보 강화**

-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포털 구축, 뉴미디어 활용 홍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 강화

○ 또한, **청년과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7대 중점 정책에 대한 보완방안**도 제안

① **일학습병행제**: 졸업생에서 재학생 단계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고,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활성화 제안

② **NCS 제도**: 공공부문 NCS 기반 채용을 확산하고, NCS기반 국가 자격 개편을 통해 NCS와 노동시장 경력을 연계할 것을 제안

③ **임금체계 개편**: 상위 10% 임금인상 자제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하고, 직무급 체계 도입 등에 유용한 임금정보의 생산 제안

④ **K-MOVE**: 해외취업과 K-MOVE스쿨 및 청해진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외취업 맞춤형 연수·교육을 확대

⑤ **미래 신직업 창출**: 신직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하고,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진로교육을 지원

⑥ **시간선택제 일자리**: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 확대,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

⑦ **일·가정양립**: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일·가정양립 캠페인 (Balance! Korea) 전개

「일자리 중심 국정운영」 주요내용

1. 추진배경

-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,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

* 서비스산업 비중(GDP 대비, %) : 네덜란드(75.9), 독일(68.4), 한국(59.3)
* 고용률(% , 2013) : 네덜란드(74.3), 독일(73.5), 한국(64.4)

- 국민들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

* 경제혁신3개년계획 성과평가 결과(국민경제자문회의·KDI, 2016)
: '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'과 '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'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응답

2.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전략

- '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' 국정운영 방향 설정

- 노동개혁 완수 및 추가개혁 추진
- 모든 정책을 '일자리 프레임'으로 재구성
- 교육개혁으로 노동개혁 뒷받침

⇒ 노동개혁 완성 및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1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가능하고 잠재성장률 1.25%p 상승(IMF WP, 2014)

- 독일·네덜란드도 이를 통해 단기간에 고용률 70% 진입
* 독일: ('04) 65.0% → ('08) 70.2%, 네덜란드: ('95) 65.1% → ('99) 70.8%

- 범부처 집행체계를 구축, 고용률 70% 달성에 정부역량을 총결집

- 거시 경제를 성장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
-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전면 실시
- 고용률 70% 달성 추진체계 구축

- 경제부총리 중심의 추진체계를 매월 개최
- 소관부처별 책임제 도입
- 청년·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

「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」 주요내용

1. 노동개혁 추진현황

- 추진 경과

-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('14.9) → 노사정대타협('15.9) → 노동개혁 5법 국회제출('15.9) → 공정인사·취업지침 규칙 마련·시행('16.1)

- 주요 추진 내용

- 근로기준법 : 근로시간 단축,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
- 중장년일자리법(파견법) : 뿌리산업(금형·주조·용접 등 6개 업종) 파견 허용, 고령자(55세 이상)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
- 비정규직보호법(기간제법) : 제한적 기간연장 허용(2년+2년), 추가 2년 이직수당 지급
- 고용보험법 : 실업급여 지급수준·지급기간 확대*,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**
* 실직전 평균임금 50%→60%, 90~240일→120~270일
** 최저임금의 90%→80%

- 산재보험법 :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
- 공정인사지침 :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
- 취업규칙지침 : 임금체계 개편시 취업규칙 개정 절차

- 노동개혁으로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, 고용·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 및 사회안전망 제고 효과

- 근로시간 단축(15만개), 임금피크제(13만개), 상위 10% 임금인상 자제(9만개) ⇒ 37만개 고용창출 효과
- 통상임금 명확화, 공정인사지침, 취업규칙지침 ⇒ 고용·노사관계 불확실성 제거
- 실업급여 수준 및 기간 확대, 출퇴근 재해보상 도입 ⇒ 사회안전망 확충

2. 향후 추진전략

①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

- 노사정 복귀 설득과 동시에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완료
- 2대 지침의 기업현장 착근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(공정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고용안전망 강화) 노동개혁 진행

② 노동개혁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

- 청년·비정규직 등 과소대표 계층의 이해관계 반영 필요
 -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·공론화 협의 강화
 - 합의 중심의 노사정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
- ※ 이미 개별기업에서는 노사의 자체적인 제도개혁(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, 노사합의로 자동승진제 폐지, 노조가 협력사에 임금공유제 제안 등)이 확산

③ 추가 개혁 추진

- 고용보호법제 개선,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,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추가적인 개혁 아젠다를 발굴·추진

④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

-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상호 보완적 기능
 - 교육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
- 노동시장과 교육의 관계
 - (청년실업) 노동시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일자리 미스매치
 - (기혼여성 고용부진) 취학자녀로 인한 경력단절
 - (이중구조)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임금 요구 및 고용불안에 대한 저항
- 교육개혁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 (예시)
 - 자녀교육부담 완화 → 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출 → 맞벌이로 가구소득 증대 → 임금인상 요구 완화 → 청년신규 채용 확대 → 자녀교육 부담 완화

「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」 주요내용

1. 청년과 여성 고용 현황과 한계

□ 청년과 여성 고용 현황과 한계

- (청년) '15년 41.5%로 '12년 대비 1.1%p 증가하였으나, 금융위기 이후 40% 초반 유지
- (여성) '15년 55.7%로 '12년 대비 2.2%p 증가하였으나,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저조

□ 고용률 부진 원인

- (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) 청년은 인력수급 불일치, 베이비붐 세대 체류 증가로 취업 준비기간 증가 및 노동시장 진입 지연, 여성은 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지속
- (일자리 지원정책의 한계) 일자리 사업이 복잡·분절되어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, 정책 효과성과 사업 인지도 저조 등 실효성이 낮음

2. 청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실효성 제고

① 재정지원 일자리정책을 효율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

- (현황) 다수 부처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중이나 정책대상 및 목표 중첩, 비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정책효과가 반감
- (개선방향)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, 청년 및 여성 일자리사업 조정 및 통합 추진

② 고용Zone과 청년희망재단 중심 민관협업 추진

- (현황) 일자리정책 집행시 민관 협업체계 부족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
- (개선방향) 청년고용대책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하여 고용Zone을 통해 10만명이상 취·창업 지원(일학습병행제, 고용디딤돌, 사회맞춤형 학과, 기업 대학 등)

③ 기업에서 개인으로 고용보조금 지원방식 개선

- **(현황)** 사업자 위주의 고용보조금 지급으로 재정투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하고 근로조건 개선 성과 미흡
- **(개선방향)** 고용보조금 사업 전면 평가를 통한 사업 조정·실효성 제고 및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직접지원 병행

④ 저소득층 근로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

- **(현황)** 저소득층 근로청년의 금융부담 가중 및 실업난 지속
- **(개선방향)** 시혜성 지원이 아닌 일자리 매칭, 일자리 능력제고 방향으로 지원하며, 저소득층 청년 특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학자금 상환 지원

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홍보 강화

- **(현황)** 청년고용정책 및 일·가정양립 정책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참여 저조
- **(개선방향)**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식 다양화, 대중홍보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정책 포털 구축 및 앱 개발 등

3. 청년과 여성 일자리 중점정책별 보완 방안

① 일학습병행제 확대

- **(현황)** 참여율은 저조하나, 만족도는 높음
- **(개선방향)** 훈련이수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, 졸업생에서 재학생 단계로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하며,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활성화*
- *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(IPP):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연계 산학협력훈련제도

② NCS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제도 확산

- **(현황)** NCS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 및 민간기업의 활용 저조
- **(개선방향)** 공공부문 선도적 도입, 민간 확산과 NCS와 노동시장 경력 연계 및 대학 등 교육기관 NCS 정보제공 기능 강화

③ 임금체계 개편

- **(현황)** 대기업·금융기관이 도입을 선도하고 있으며, 기타 민간부문은 임금피크제 도입 저조, 성과·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근본적 개편은 미흡
- **(개선방향)** 상위 10%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층 신규채용 확대(노사정 합의 이행), 전국 중앙단위(업종별) 노사협의를 통한 기업규모간 초임 격차 완화, 실무에 유용한 임금정보 생산 및 임금정보시스템 개편

④ K-MOVE 내실화

- **(현황)** 해외 취업자 증가 추세에도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
- **(개선방향)** 해외취업업종 맞춤형 연수/교육 확대, 민간 해외취업 연계 우수기관 선별, 육성 및 규제조정, 현지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인정보 확충, 취업 알선 등

⑤ 미래 신직업 창출

- **(현황)** 미국,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직업수가 적음
* 한국 11,655개, 미국 30,654개, 일본 16,433개
- **(개선방향)** 신직업 규제 완화와 정보제공 강화 및 미래진로 선택교육 실시

⑥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

- **(현황)**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여건이 미흡하고,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
- **(개선방향)** 대체인력 서비스 지원 확대, 생애주기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추진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윈스톱서비스 강화

⑦ 일·가정양립 문화 정착

- **(현황)** 남성의 육아휴직은 5.6%에 불과하고,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미진하며, 근무방식 개선 어려움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지연
- **(개선방향)** 맞춤형 보육, 시간제 보육반, 방과후 아카데미 등 확대, 활용이 부진한 제도(육아기근로시간단축, 아빠육아휴직 등) 홍보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캠페인(Balance! Korea) 전개